
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9. 3.



외교부



목 차

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4
1. 2019년 역점 추진과제	5
①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	
②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	
③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	
④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	
2. 신규 발굴 과제	15
①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	
② 재외공관 중심 「Team Korea」 모델 정착	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17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□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토대 마련

- 남북 정상회담 및 북·미 정상회담을 통해 '완전한 비핵화'에 합의,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 제시
 - 남북대화 진전 및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북·미대화 견인

□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심화

-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
 - * ▲(미) 3차례의 정상회담(5.22, 9.24, 11.30) ▲(중) 대통령-리커창 총리 회담(5.9) 및 정상회담(11.17) ▲(일) 아베 총리 방한(2.9) 및 6년 반만의 대통령 방일(5.9) ▲ (러) 러시아 국민 방문(6.21-24) 및 최초 하원 연설, 정상회담(11.14)
- 주변 4국과의 실질협력 증진 및 현안 해결
 - **(미)**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조치 면제(18.4월),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효(19.1월), 미국의 對이란 제재 면제(18.11월), 제10차 한·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(19.2월) 등 민감한 양자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
 - **(중)** 사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관계는 17.12월 국민방중 등을 계기로 해소국면으로 진입 / 금년 고위급 교류 추진 등을 통해 교류·협력의 회복 속도 가속화 필요
 - **(일)** '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' 2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공감대 형성 / 단, 과거사 문제*로 갈등 지속
 - *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및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 관리 도모
 - **(러)** 남·북·러 3각협력 공동연구 개시 합의(18.6월), 한·러 지방협력포럼 출범(18.11월), 9개 다리 행동계획 서명(19.2월) 등 정상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

□ 신남방·신북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

-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도·아세안 국가와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신남방 국가와 교류·협력 확대
-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, 러시아와 9개 다리 분야* 협력 등을 통해 북방지역과 연계성 강화
 - * 가스, 철도, 항만, 전력, 북극항로, 조선, 산업단지, 농업, 수산
- 전통우방으로서 국제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유럽 주요국 및 EU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·과학기술 분야 실질협력 강화

□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

- 인도·아세안 등 신흥경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재외공관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등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 대응
- 다자협력전문가 및 KOICA 장기봉사단 확대 파견을 통한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참가자 사후관리·지원

□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'보다 안전한 삶' 구현 및 재외국민 편익 제고

- 재외국민 사건·사고 초동대응 컨트롤타워인 「해외안전지킴센터」 신설(18.5월), 24시간 365일 대응체제 구축
-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정(19.1월 공포)으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
- 영사·민원 서비스 혁신*을 통한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
 - * 재외공관 통합 전자행정시스템(G4K) 구축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등

□ 대국민 소통·참여를 강화하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적극 추진

- 국민외교센터(18.5월 개소)를 중심으로 대국민 소통을 통해 외교정책에 국민 의견 반영 노력
- 범정부 차원 및 지자체·민간과의 공공외교 협력 활성화
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□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

-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남·북·미 대화 재개,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
- 2차 북·미 정상회담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, 비핵화-상응 조치 관련 북·미 간 생산적인 논의 진행,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제고
 - 향후 북·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 진전 기대

□ 자유주의 규범기반질서 약화

- ▲자국이익 우선주의 ▲권위주의·포퓰리즘 부상 ▲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이 자유주의 규범기반질서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
 -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축소에 따른 규범기반질서의 약화 추세

□ 미·중 간 경쟁구도 심화로 우리 외교·경제 운영에 부담 가능성

2. 업무추진 방향

□ (한반도)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

- 한·미 간 긴밀한 공조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가시적 성과 도출
- 비핵화-평화체제-남북관계-북미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 강화

□ (균형 있는 협력외교)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및 외교다변화 본격 구현

-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, 아세안 등으로 협력의 외연 확장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

□ (국민중심외교)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

- ▲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▲3.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▲해외 진출 기업 지원 ▲국민과의 소통 강화 ▲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등

□ (외교부 혁신) 인력·조직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

- 새로운 외교수요에 맞게 인사·조직 개편, 기강 확립 및 외교인프라 확대를 통해 외교부 업무 수행체제의 혁신적 개편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역점 추진 과제	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투톱 정상외교
	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견인 ▪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	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미) 호혜적·포괄적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· (중) 교류협력 전면 회복 및 전략적 소통 지속 강화 · (일)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 · (러)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▪ 외교다변화 본격 구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력파트너 다변화 · 수행방식 다변화 ·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 및 개발협력 외교 강화 · 세계경제의 협력구도 활성화에 기여
	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▪ 3.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▪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일자리 창출 ▪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지속 추진 ▪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
신규 과제	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2기 추진 ▪ 외교관 기강 확립 및 선제적 사고예방
	재외공관 중심 「Team Korea」 모델 정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외공관 중심 해외주재 공공기관간 조율·조정 강화 ▪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의 재외공관상 정립 ▪ 정책공공외교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립

① 실용적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

- (투톱 정상외교) 대통령·총리 간 역할 분담 ⇒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 효과적 대응 /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 일정의 선택과 집중 강화
 - (순방) ▲일부 다자정상회의에는 총리 참석 우선 검토 ▲정상 방문이 어렵거나 답방 미 실시 국가 중 실질협력 수요·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 위주로 총리 방문 추진
 - (외빈 접수) 대통령 예방 / 총리와 회담 및 공식 오·만찬 사례 확대
- 총리가 정상외교를 보완함으로써 외교다변화에 기여

②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

가.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견인

- 남·북·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프로세스 가속화
 - 2차 북·미 정상회담(하노이)에 이어, 북·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지원
 - 비핵화는 물론, 북미관계·평화체제·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 추진
 - 특히, 북·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, 북·미 간 점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추진
 - 2차 북·미 정상회담시 확인된 비핵화-상응조치 관련 북·미 양측 입장을 토대로, 한·미 양국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 지속 조율
 - 정상·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수시 소통·협력

-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·일·러 및 국제사회의 지지·협조 결집
-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및 공공외교를 통해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정부 노력 및 성과 홍보

□ 추진 계획

- **(비핵화)**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 추진
 - 비핵화와 함께,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 추진
 - 한·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,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 지속 확대
- **(‘밝은 미래’ 제시)**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해 밝은 미래 제시 및 비핵화·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 역할 지속
- **(국제사회 협조 확보)** 북·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실현 과정에서 중·일·러 등 국제사회의 건설적 기여 견인

나.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
□ 비핵화 진전과 연계,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

-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토대 마련

□ 추진 계획

- 2차 북·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·미간의 대화 의지를 바탕으로,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체제 수립 지속 추진
-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,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국 간 논의 추진

3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

[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]

가. 對美 관계 : 호혜적·포괄적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

-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·한반도 평화정착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 수행
 - 정부 간 협의와 함께 미국 조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산 노력 경주
- 한·미 간 안보·경제·통상 현안의 호혜적·합리적 해결 노력 경주
 - 차기 방위비분담금협정(SMA) 협상의 선제적 대응 준비 등
- 한·미 간 협력 외연 확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
 - 경제·개발, 여성 역량 강화, 보건, 에너지 및 지역협력 등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 발굴·확대

나. 對中 관계 : 교류협력 회복 및 전략적 소통 지속·강화

-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교류협력 회복 및 관계발전 지속 추진
 - 고위급 교류 계기 한·중 교류협력 관련 내실있는 성과사업 기반 마련
 - ▲한·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 ▲미세먼지 대응 ▲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등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에서 실질적 성과 도출 노력 지속
-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지속
 - 양국 정상 포함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통해,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

다. 對日 관계 :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

- 과거사 민감현안 관리 및 실질협력 증진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지속
 -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
 - 투트랙 기조하에 과거사 문제들이 여타 분야 실질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
- 고위급 차원의 소통 강화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 지속
 -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·한미일 전략적 공조 유지
- 양국 국회·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 등 공공외교 추진

라. 對러 관계 :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

- 고위급 교류 정례화를 통한 한·러 관계의 도약
 - 푸틴 대통령 방한 및 제5차 동방경제포럼 우리 고위급 참석 추진을 통해 전략적 소통 및 실질협력 기반 강화
 - ▲2020년 한·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 ▲한·러 지방협력 포럼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한 교류 협력 강화
-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·러 실질협력 증진
 - 국민방러(18.6월) 후속조치의 체계적 이행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
 - 2020년까지 교역량 300억불, 인적교류 100만명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

[외교다변화 본격 구현]

가. 협력파트너 다변화

- 신남방정책 지속 시행 및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
 - (아세안)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정상·외교장관 등 고위급 소통 지속

- (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) 한·아세안 관계의 미래비전 제시 및 실질협력 가속화
- (한·메콩 정상회의 격상) 한·메콩 협의체를 정상회의로 격상,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 개최
- **(인도)**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으로서 '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' 내실화
 - 모디 총리 방한(19.2월)에 이어 한·인도 외교·국방 차관회의 개최 추진

□ 신북방정책의 내실화

- 중앙아 지역 대상 신북방정책 본격 이행
 -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가들과 신뢰 구축
 - 중앙아 국가들과의 ▲연계성 증진 ▲공동번영 기반 조성 ▲문화·인적교류 강화
- 신북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러시아와 신북방정책 내실화 도모
 - 한·러 「9개 다리(9-Bridge) 액션플랜」의 체계적 이행
 - 남·북·러 3각협력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

□ 유럽·중남미·아프리카·중동과의 협력 다변화·내실화

- **(유럽)** ▲수교 기념 계기 고위급 인사 교류 강화* ▲V4(체코·헝가리·폴란드·슬로바키아), 터키, 흑해연안국 등 우리 기업 진출 거점국과 산업·인프라·방산 등 협력 강화
 - *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(60주년) / 헝가리, 폴란드(30주년)
- **(중남미)** ▲한·중미 FTA 발효(19년 상반기 예상) ▲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등 무역·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
- **(중동·아프리카)** ▲UAE·사우디·남아공·이라크·이집트 등 주요 협력 파트너와 실질협력 다변화 ▲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(19년 상반기 예상) 등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및 한·아프리카 청년 네트워크 확대

나. 수행방식 다변화

-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에 대응하고, 우리 외교의 우군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소다자·다자협의체 강화·발전
 - 므타(MIKTA)* 협력 강화를 통한 중견국 외교 적극 전개
 - 므타 회원국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
 - * 멕시코(M), 인도네시아(I), 한국(K), 터키(T), 호주(A)로 구성된 외교장관 협의체(13.9월 출범)
 - 각종 지역협의체들과의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
 - 한·일·중 3국 정상회의를 통한 동북아 3국간 실질협력 증대
 - 한·중앙아 협력포럼* 및 한·비셰그라드(V4) 협의체**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계 심화
 - * 중앙아 5개국 :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
 - ** 동유럽 체제전환국 4개국 : 체코, 헝가리, 폴란드, 슬로바키아

다.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 및 개발협력 외교 강화

-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 지속 확대
 - 유엔 평화유지활동(PKO) 지속 참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관련 논의 선도
 - '여성과 함께하는 평화'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2018년 출범한 「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」 지속 추진
 -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 마련 논의를 위한 유엔 내 논의에 적극 참여
- 국제기구 내 우리의 영향력 확대 및 주요 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
 -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지지 교섭
 -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유엔 등 주요 기구와의 협의회 개최

□ 글로벌 가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

- 3P(사람·평화·상생번영)를 중심축으로 하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이행에 기여
- 신남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에 기여하는 전략적 ODA 추진
 - * 22년까지 아세안·인도에 대한 무상원조 2배 이상 확대, 시그니처 사업 추진 등

라. 세계경제의 협력구도 활성화

- G20·APEC 등 정상회의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발휘, 세계경제의 협력구도 활성화에 기여
- G20·APEC에서 국제경제 대립구도 대처 및 세계적 불확실성 차단 노력에 동참
- WTO 개혁 및 新국제경제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

4 국민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

가.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 증진 : 재외공관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화

□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

-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(21.1월 시행 예정)의 실효적 이행 기반 마련
- 해외 사건사고 예방·대응 능력 확충을 통해 재외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‘골든타임’ 확보 및 사건사고 예방·대응 업무 내실화

□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동포사회-모국 간 상생 발전 도모

-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당면 과제(차세대 육성, 해외입양인 지원 등) 해결 및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

□ 영사서비스 혁신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

- 재외국민을 위한 ‘통합 전자행정시스템(GAK :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)’ 구축
- 차세대 전자여권(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) 발급장비 도입 및 시스템 구축

나.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

□ 재외동포와 함께 ‘겨레의 축제’로 기념함으로써 재외동포 통합·화합 도모

- 재외공관 주최 100주년 기념행사, 사적지 탐방, 학술 세미나 및 사진전 등(49개 공관 64개 사업)
- 한·중 우호 카라반(7월)
 - 국민대표단(100명)이 중국 내 임정소재지(5개)를 순회하며 역사현장 탐방, 소통·교류행사 등을 통해 ‘미래지향적 동북아 평화협력’ 메시지 발신

-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(19~21년)
 - 일본 우토로 마을(강제징용 재일동포 거주지) 강제 철거 위기를 한·일 양측이 협력해 극복한 역사 보전 및 ‘양국간 우호와 평화·인권의 가치 계승’을 위해 건립 추진

□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

다.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일자리 창출

□ 대외 경제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 진출 지원 강화

- 재외공관의 수입규제 동향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확대
- 민관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, 방산 및 인프라 수주 등 해외시장 적극 개척
- 사회보장협정*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해외진출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경제협정 체결 노력 강화

* 재외 우리 기업·근로자(74,000여명)가 면제받은 사회보험료 누계액 : 약 3.4조원

□ ‘맞춤형 청년 해외 진출 지원’ 강화

-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(30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)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진출 사업 발굴 및 추진
- 다양한 파견 사업*을 통한 청년 해외진출 기회 제공

* KOICA 장기 해외봉사단, 국제기구, 재외공관 현장 실습원 및 한상 인턴십 등

라.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지속 추진

□ 국민과의 소통, 국민 참여 강화를 통한 국민외교 적극 추진

- 온·오프라인 국민외교 플랫폼 활용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
- 외교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사업 실시

□ 국민-정부-지자체 간 범국민·범정부적 공공외교 협업 강화

- 공공외교 협업·조율 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(위원장 : 외교부장관)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관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
-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외교 수행 기관(중앙행정기관·지자체·전재외공관) 간 업무 효율성 제고

□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

- 지역·대상별 맞춤형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여론 조성 및 확산
- 재외공관의 親韓 인사 저변 확대 및 지지기반 공고화 노력 강화

마.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

□ 한·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, 미세먼지 관련 협력사업 진행

- 한·중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등 계기 미세먼지 협력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
- 제23차 한·중 환경협력 공동위(19.1월, 서울) 합의사항* 구체화
 - ▲대기질 예보 정보·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▲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▲중국 내 대기질 공동연구 대상 지역·범위 확대 등 대기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 협력 지원
- 18.10월 출범한 ‘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(NEACAP)’ 본격 가동으로 조기성과 도출 추진

□ 대중국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미세먼지 관련 국민의 우려 해소

1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

- (개요) 보다 근본적인 큰 틀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·번영 시대와 국민 중심 외교에 걸맞은 외교기능 수행체제 개편
 - 단기적으로 새로운 외교 수요에 맞게 인사·조직을 개편하고, 중·장기적으로 외교인프라 확대와 외교기능 수행체제 개편
-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2기 추진
 - (「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」 구축) ▲외교센터* 환수(2020년) 계기 국립외교원-외교센터-외교사료관의 유기적 연결 ▲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중심공간으로 활용(여권과 영사콜센터 이전, 국민외교센터 분소 설치 등)
 - * 96년 주한외국대사관 사무실 임대목적으로 준공, 19년말 민간위탁관리 종료에 따라 외교부가 직접관리 예정
 - (외교인력 정예화) ▲고위직 중심의 인력구조를 업무·실무 중심으로 하향 조정 ▲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위 외무공무원 책임성 강화 ▲공관장 자격심사 및 복무관리 강화
 - (조직 정비) ▲외교다변화 등 외교수요를 반영한 조직 재편 ▲기능형 거점공관 운영(거점공관에 인력·재정 집중, 사증·회계 기능 주변공관 지원)
 - (정책역량 강화) 정보분석 및 외교정책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체제 구축
 - (지역국(局) 조정 역량 강화) 외교부 내 지역국이 해당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
 - ▲언어·지역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배치 ▲외교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국의 조정·조율 강화

□ 외교관 기강 확립 및 선제적 사고예방

- 감찰담당관실 신설(18.3월)을 통한 對재외공관 감사역량 강화
 - ▲감사 주기에 구애 받지 않는 선제적·탄력적 감사 적극 실시 ▲분관·출장소 등 사각지대 집중 점검
- 주요 비위 처벌 사례 수사 전파 및 예방 교육 강화
 - ▲본부·재외공관 대상 대면 폭력예방교육 실시(외부전문가 현지 출장)
▲공관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사이버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사고예방
- 직원 복무 관리 강화
 - ▲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객관성·공정성 강화 ▲다면평가 참여 대상 확대

② 재외공관 중심 「Team Korea」 모델 정착

□ 국가적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해, 재외공관 중심으로 해외주재 공공기관 간 정책 조율·조정을 강화하는 「Team Korea」 모델 정착 노력

- 재외공관의 조정 역할 강화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관장의 실질적 관리 및 감독 체제 구축

* ASEAN 대표부 운영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모범사례로 활용

□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의 재외공관상 정립

- 외교·안보 업무와 병행하여 ▲일자리 창출 ▲기업지원 ▲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재외공관 역할 강화

□ 정책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립

- ▲한반도 평화프로세스 ▲포용국가 등 우리 정부의 핵심적 정책 기조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확산 도모
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**실용적인 정상외교를
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**

**비핵화를 진전시키고
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습니다.**

**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 및
외교다변화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.**

**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교를
실현하겠습니다.**

**지속적인 혁신으로
외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**

**재외공관을 중심으로
“Team Korea”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**